민국(民國) 후기 북경(北京)의 경찰과 인구 관리

윤형진*

〈차 례〉

1. 머리말
2. 경찰 조직의 구조
3. 일본 점령기 인구 관리 방식의 변화와 지속
4. 전후 국민당 정권의 개혁 시도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북경(北京) 성구(城區)의 경찰 조직을 소재로 도시 통치의 방식에서 건국 전후의 연속성을 탐색하였다. 중국에서 호구(戶口)와 관련된 업무를 기층의 경찰 조직이 담당하는 현재의 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의 말단기구인 파출소가 도시의 기층 통치를 담당하고, 특히 호정(戶政)의 담당기관으로서 인구 관리를 주관하는 구조가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된 청말(淸末)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의 점령과 전후 국민당의 복귀라는 정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경찰기구의 인적 구성이나 조직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기층에 이르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국가기구인 경찰 조직이 인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강사

구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 역시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일본 점령 시기 '치안강화운동(治安强化運動)'을 통해 일본 헌병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고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47년에 국민당 정권이 시정부 산하에 민정국(民政局)을 설치하고 경찰국의 호정 부문을 이관했던 것은 새로운 변화였으나, 민정국이 파출소와 같은 산하의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층의 호정에는 파출소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호정의 민정 계통으로의 이관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중국공산당의 북경 접수로 다시 한 번 정권의 교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뒤이은 호정의 공안국(公安局) 이관으로 민정 기구의 인구 관리는 짧은 예외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인구 관리를 경찰이 담당하는 현재의 방식은 장기적인 체제이며, 1949년 혁명 이전의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북경(北京), 경찰, 파출소, 호정(戶政), 연속성, 치안강화운동(治安强化運動), 민정국(民政局)

1. 머리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의 기층 통치에서 경찰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의 기층 조직인 공안파출소(公安派出所)는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와 함께 최말단의 국가 기구로서, 국가와 도시 주민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1] 특히 중국에서

1) 公安派出所와 街道辦事處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 의 말단 국가기구의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윤형진, 「中華人民共和國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형성 - 건국 초기(1949-1954) 北京의 지역별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민정 기구가 아닌 경찰 조직이 호구의 등록과 이전을 비롯한 인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경찰 조직이 도시 통치에서 가지는 특별한 위상을 보여준다. 중국의 호구제(戶口制)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는 주민 등록 제도와 다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가져오는 등 실질적인 '신분제'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 관리를 경찰이 담당하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2)]

중국 특유의 호구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인 1950년대에 형성된 것이지만, 인구 관리를 경찰이 담당하는 방식 자체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근대적인 경찰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인구 관리를 경찰이 담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1949년 이전에 나타난 경찰의 인구 관리 방식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중국의 통치 방식에 나타나는 특수성의 기원을 탐색하는 일이며, 동시에 1949년 혁명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근대적 경찰 제도가 일찍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기에 유리한 북경[3)]

『中國近現代史硏究』 63, 2014 참조.

2) 戶口制의 기능과 사실상의 '신분제'로서의 호구제라는 논의에 대해서는 奧村哲, 「近現代中國における社會統合の諸段階」, 『現代中國硏究』 14·15, 2004; Wang, Fei-Ling, *Organizing through division and exclusion : China's Hukou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이민자,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등 참조.

3) 北京은 1928년 南京國民政府가 수립되면서 '北平'으로 이름이 바뀌 었고, 1937년에 일본에 점령되면서 점령당국에 의해 '北京特別市'로 바뀌었다가 終戰 이후 다시 '北平'이 되었다. 그리고 中華人民共和國 개국을 선포하기 직전인 1949년 9월에 다시 '北京'으로 개명되었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기구의 명칭이나 문건의 제목 등에서 사용되거나 사료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의 명칭으로 쓰인 경우에는 모두 北京으로 통일해 사용하려고 한다.

을 지역적인 범위로 하여, 민국 시기 경찰의 인구 관리 방식과 그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을 통한 인구 관리가 시작된 이후 새로운 정권의 등장으로 변화의 계기를 맞았던 일본 점령기와 항일전쟁 종전 후의 국민당 정권 시기에 나타난 연속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호구제의 기원과 관련한 논저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호구제의 기원을 1949년 이전까지 소급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으며, 1949년 이전의 기원을 다루는 경우에도 경찰의 호구 관리라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4] 북경의 경찰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있지만, 인구 관리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다.[5] 1949년을 전후한 통치의 연속성을 경찰

---

4) 戶口制의 기원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주로 中華人民共和國 초기의 제도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Cheng, Tiejun; Selden, Mark, "The Origins and Social Consequences of China's Hukou System", *The China Quarterly*, 139, 1994; 湯水清, 「論新中國城鄉二元社會制度的形成」, 『江西社會科學』, 2006-8; 王海光, 「中國城鄉二元戶籍制度的建立」, 華東師範大學中國當代史研究中心 編, 『中國當代史研究(二)』, 九州出版社, 2011.) 1949년 이전에서 戶口制의 기원을 찾는 연구들은 주로 保甲制와 같은 주민조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Huen, W.P.,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he Qing Dynasty: Precursor to the PRC's Hukou System", *China report*, 32-4, 1996; 陸益龍, 『戶籍制度-控制與社會差別』, 商務印書館, 2003의 2장; Wang, Fei-Ling, *Organizing through division and exclusion : China's Hukou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의 2장.) 戶籍制度의 정비 과정을 다룬 王海光, 「中國戶籍制度現代化演進路徑的歷史考察(1908-1949)」, 『安徽史學』, 2011-5에서 짧게 '戶警分立'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예외적이다.

5) 北京의 民國 시기 경찰에 대한 연구로는 穆玉敏, 『北京警察百年』,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4; 公一兵, 「北京近代警察制度之區劃研究」, 『北京社會科學』, 2004-4; 임상범, 「北京地域 警察官의 構成과 그 變化」, 『中國近現代史研究』, 27, 2005; 林相範, 「北京 地域 警察本部의 組織 內容-1928년부터 1949년까지」, 『大邱史學』 78, 2005; 임상범, 「北京地域 警察의 基層組織-1901년부터 1949년까지」, 『大丘史學』 88, 2007; 李自典, 「警察與近代北京城市治安管理- 以1901~1937年爲中心的考察」, 『北京社會科學』, 2010-4 등을 들 수 있다. 北京을 포함하는 民國 시기 경찰에 대한

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연구도 있지만 역시 인구 관리라는 점을 집중해서 다루지는 않고 있다.[6]

이하 본론에서는 우선 파출소를 중심으로 북경 경찰 조직의 구조와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점령 이후의 상황과 점령기의 인구 관리에 나타난 변화와 그 제한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의 상황과 새로운 인구 관리 방식의 도입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호구제의 기원과 관련된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한편, 1949년 전후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심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경찰 조직의 구조

북경의 시정에서 경찰 기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시공서(市公署)의 다른 부문들과는 달리 경찰조직이 국(局)을 정점으로 기층의 파출소에 이르는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일본 점령기 북경의 경찰 기구는 경찰국 산하에 분국(分局)-분주소(分駐所)-파출소로 이어지는 3단계의 하급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 경찰국 산하에는 내성(內城) 6개, 외성(外城) 5개, 교구(郊區) 4개 등 모두 15개의 분국이 있었다.

연구사는 林相範, 「20世紀 前半期 北京의 警察과 市民生活」, 『中國學報』 48, 2003; 段銳·劉貝, 「中國近代警政史研究綜述」, 『江蘇警官學院學報』, 2013-1 참조.

6) 魏斐德, 梁禾 譯, 『紅星照耀上海城1942-1952 - 共産黨對市政警察的改造』, 人民出版社, 2011. 이 연구는 Frederic E. Wakeman Jr.의 上海 경찰 3부작의 마지막 권으로서, 저자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초고만 유작으로 남겼다. 영어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고, 중국어 판본이 먼저 출판되었다.

여기에 태평양전쟁 개전 이후 일본군이 동교민항(東交民巷) 사관구(使館區)를 점령하면서 내칠구(內七區) 분국이 새롭게 설립되어 분국의 수는 16개로 증가하였다.[7] 각 구의 경찰분국에는 시공서의 경찰국 각 과에 대응하는 경무(警務), 보안(保安), 경법(警法), 특무(特務), 경제(經濟) 등의 계(系)가 설치되어 있었다.[8]

〈표1〉 북경 성구(城區)의 분국별 분주소와 파출소의 수 (1944년)

분국	분주소	파출소
內一分局	5	20
內二分局	5	19
內三分局	5	18
內四分局	4	20
內五分局	5	19
內六分局	4	16
內七分局	1	-
外一分局	4	16
外二分局	4	16
外三分局	5	20
外四分局	5	20
外五分局	5	20
城區총계	52	240

* 出典: 蔡恂, 『北京警察沿革紀要』,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 1944, p. 14.

분국 아래에는 다시 4-5개의 분주소를 두었으며 분주소 아래에는 기층 경찰조직인 파출소가 있었다. 동교민항 지역에 신설한 내칠분국을 제외하면 성구에 설치된 경찰분국에는 각각 4-5개의 분주소와 16-20개의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9] 북경 지역에서 파출소가 처음 설립된 것은 선통(宣統) 원년(元年)이었는데, 이때부터

---

7) 內七區 警察分局의 설치는 1943년 4월에 이루어졌다. 蔡恂, 『北京警察沿革紀要』,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 1944(이하 『北京警察沿革』으로 略稱), p. 12.

8) 向風,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北京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編, 『日僞統治下的北平』, 北京出版社, 1987(이하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으로 약칭), p. 265.

9) 城區 외에 四郊에 설치된 分駐所는 총 15개, 派出所는 총 140개였다. (『北京警察沿革』, p. 14.)

1924년까지 340개이던 것이 교구(郊區)까지 경찰이 관리하게 된 1924년에 468개로 늘었다가, 국민정부가 수립되고 수도가 남경(南京)으로 바뀐 1928년에 322개로 축소되어 1944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분주소의 수 역시 1932년에 처음 분주소가 개설된 이래 내칠분국의 성립과 함께 1개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1944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10] 점령을 전후하여 기층 경찰조직의 틀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점령기의 북경 경찰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국에서 파출소에 이르는 지역별 조직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 경찰 인력 중 분국 이하의 지역조직에서 일하는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43년 1월 북경특별시공서(北京特別市公署)에서 심사·결정한 경찰국 산하 각 기구의 정원을 보면, 총 정원 11,286명 중에 시공서 경찰국 정원이 938명이었고, 경찰 산하의 경찰제1대에서 제6대까지의 부대 정원이 1,897명이었다. 이 외에 차경대(車警隊), 정집대(偵緝隊), 소방대(消防隊), 여경대(女警隊), 악대(樂隊) 등 각 대의 정원이 1,261명, 경찰교련소(警察教鍊所), 감화소(感化所), 신문검사소(新聞檢查所), 우전검사소(郵電檢查所), 경찰의원(警察醫院), 차참검사소(車站檢查所), 수발창기집조소(收發娼妓執照所), 거주증지문정리소(居住證指紋整理所), 경견대(警犬班) 등 경찰 각 소의 정원이 총 432명 등이었다. 그리고 분주소와 파출소를 포함하는 분국의 정원 총계가 6,758명으로 북경 전체 경찰 정원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11] 그리고 〈표2〉에서 보듯이 분국의 정원 중 하급 경찰인 경장(警長)과 경사(警士)의 정원이 총 6,089명으로 분국 정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파출소의 규모와 조직을 살펴보면, 일본 점령기 파출소 한 곳의

10) 『北京警察沿革』, pp. 18-20.
11) 『北京警察沿革』, pp. 84-91.

정원은 경장 2명, 경사 7명, 호적경(戶籍警) 2명 등 총 11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12] 그러나 재직 인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파출소에 실제로는 경장 2명, 경사 3-5명, 호적경 2명이 근무했다.[13] 파출소의 관할 구역은 '단(段)'이라고 불렸으며, 파출소는 각 단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다.[14] 파출소를 책임진 것은 두 명의 경장이었고, 그 아래에 6~8명의 경사가 있었다.[15]

〈표2〉 경찰분국별 경장 및 경사의 정원

분국	경장	경사
內一分局	39	392
內二分局	45	374
內三分局	33	316
內四分局	31	311
內五分局	36	310
內六分局	28	302
內七分局	10	75
外一分局	32	328
外二分局	37	324
外三分局	34	332
外四分局	36	331
外五分局	33	308
東郊分局	60	421
西郊分局	80	587
南郊分局	49	409
北郊分局	40	349
총계	620	5469

*出典: 蔡恂, 『北京警察沿革紀要』,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 1944, pp. 87-88.

일본 점령 이래 경찰 행정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뿐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도 나타난다. 점령 직후에 일본 점령당국은 북경의 시장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면서 남경국민정부 시기에 북평시(北平市) 공안국장을 역임했던 여진화(余晉龢)를 임명하고 그에게 경찰

12) 吳廷燮 等纂, 『北京市志稿2 民政志』, 北京燕山出版社, 1997, p. 510.
13) 임상범, 「北京地域 警察의 基層組織-1901년부터 1949년까지」, p. 15.
14) 파출소 관할 구역을 '段'이라고 부른 것은 清末부터였다. (公一兵, 앞의 논문, p. 108.)
15)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 266-267.

국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여진화는 1937년 말 북경에 도착해서 1938년 1월 시장 겸 경찰국장으로 취임하였다.[16] 여진화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 육군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사령관인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 타다 하야오(多田駿),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등과 모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17] 그는 일본 유학 경험 덕분에 관료 경력 초반부터 일본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민국 초 단기서(段祺瑞)가 육군총장직에 있을 때 일본고문단이 있었는데, 이 고문단의 단장은 반자이 리하치로(坂西利八郎)였고 단원은 일본인 3명, 중국인 3명이 있었으며, 이 중국인 3명 중 한 명이 바로 여진화였다.[18]

여진화는 일본통이기도 했지만, 1933년 9월부터 1935년 7월까지 북평시 공안국의 국장을 역임했던 경찰 관료이기도 했다.[19] 그의 경찰국장 겸임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경찰국 운영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다. 여진화는 취임 당시부터 '경기(京畿) 지방의 치안이 중요하고 경찰국이 지방 치안의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동시에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16) 신문 보도에 따르면 余晉龢는 上海에 있다 1937년 12월 24일에 北京에 도착했고(「余晉龢昨日來京」, 『實報』 1937.12.25.), 1938년 1월에 취임했다. (「京市長余晉龢昨就警察局長兼職」, 『實報』 1938.1.9.; 「北京市政府發表談話」, 『實報』 1938.1.9; 「余晉龢市長今晨就職」, 『實報』 1938.1.10.) 기사에서 余晉龢는 前任 北平市 公安局長이자 前任 厦門市長으로 소개되고 있다. (「京津兩市場更選」, 『實報』 1938.1.7.)

17)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 259-260.

18) 張子鈞, 「回憶"新民會"」,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編, 『文史資料存稿選編8 日僞政權』, 中國文史出版社, 2002, p. 572. 다른 두 명 중 한 명은 점령기에 新民會 부회장과 華北政務委員會 建設總署 督辦을 역임했던 殷同이었다.

19) 吳廷燮 等纂, 『北京市志稿13 職官表』, 北京燕山出版社, 1997, pp. 731-732.

경찰국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공표하고 있었다.[20] 그리고 실제로 시장 겸 경찰국장으로 재임하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경찰국 방면에 정력을 기울이고 매일 오전에는 경찰국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봤다. 그리고 북지방면군의 특무기관에서 파견했던 경찰국 고문인 오카노(岡野)도 여진화의 이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21] 또한 국장 이하의 경찰 인원에 대해서도 대규모의 교체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점령을 전후하여 북경의 경찰조직은 기구뿐 아니라, 경찰국장을 필두로 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 국민당이 북경을 다시 접수하면서, 일본 점령군에 협력했던 경찰 간부에 대한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민당은 복귀 이후 경찰국의 직원 1,347명 중 심사를 통해 463명을 해직시키고, 추가로 122명을 해고했다. 남은 인원 중에도 96명은 직급이 낮아졌다. 이 외에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708명이 충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교체는 주로 경찰국 소속의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간부들과 달리 일반 경찰관들의 교체는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2] 또한 경찰 기구의 조직구조 역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23]

---

20) 「余晋龢市長宵旰圖治」, 『實報』 1938.1.15.

21)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 260.

22) 임상범, 「北京地域 警察官의 構成과 그 變化」, pp. 27-31.

23) 戰後 北京에서의 호구조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1946년 9월 27일 北平市政府 제23차 시정회의에서 통과된 「北平市戶口調查辦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北京市檔案館 編,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p. 581.) 이 辦法에서는 호구조사의 종류로 一般調查, 抽查, 特查, 總查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抽查, 特查, 總查는 일상적인 호구조사가 아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總查의 경우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一般調查는 일상적인 조사 활동으로서, 각 分局의 戶政局員이 날마다 각 段 戶籍警을 지도하여 돌아가면서 관할 지역을 조사한 후 결과 및 통계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北平市公安局呈送戶口調查辦法(1946)」, J001-001-00484.) (이하 따로 설명

3. 일본 점령기 인구 관리 방식의 변화와 지속

북경에서 경찰이 인구관리의 주관기관이 된 것은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였다. 청말 북경에서 일본을 모델로 하는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찰을 통한 호정 관리가 시작되었다.[24] 경찰 기구의 연혁을 살펴보면 광서(光緖) 31년에 공순총국(工巡總局)이 설립되었고, 다음 해에는 내외성공순국(內外城工巡局)이 폐지되고 북경내외성순경총청(北京內外城巡警總廳)이 설립되었다. 이 때 내성에는 5개, 외성에는 4개의 분청을 두었다. 이 공순국(工巡局)과 순경총총(巡警總廳)은 도시사회의 치안을 책임졌으며, 호적의 관리와 호구통계도 책임지고 있었다.[25] 북경에서 경찰 기구가 호정을 관리하는 체제가 처음으로 수립되었던 것이다.

중화민국 수립 및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후에도 기구의 이름만 바뀌고 경찰이 인구관리를 하는 제도가 계속 유지되었다. 민국 원년인 1912년에는 청대 호구의 '以籍爲定'의 편심(編審) 조사 제도를 취소하고, 내외성의 모든 호구를 통합하여 경사순경청(京師巡

이 없이 제목과 문서번호만 명기한 문헌은 모두 北京市檔案館 소장 문서이다. 번호는 '案卷'의 번호이고, 문서제목은 '文件'의 제목이다.) 戰後 국민정부 시기에도 파출소의 戶籍警들이 호정을 담당하는 관료 기구의 말단에 있었으며, 기층 경찰조직이 호구행정을 담당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24) 淸末 北京의 경찰제도 수립은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일본의 경찰제도를 모델로 삼아서 이루어졌다. 任達, 李仲賢 譯, 『新政革命與日本: 中國, 1898-1912』, 江蘇人民出版社, 2006. (<-Douglas R. Reynolds, *China, 1898-1912: The Xinzheng Revolution and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 162-167; David Strand, *Rickshaw Beijing: City People and Politics in the 1920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p. 66-72 참조.

25) 韓光輝, 『北京歷史人口地理』, 北京大學出版社, 1996, pp. 129-130. 다만 工巡局과 巡警總廳이 戶政을 관리하는 범위는 內城과 外城에 한정되었고, 郊縣의 호구는 여전히 縣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警廳)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26] 1913년에는 순경청(巡警廳)이 경사경찰청(京師警察廳)으로 바뀌었고, 남경국민정부가 수립된 1928년에는 경찰청이 공안국으로 바뀌었으나 그 직능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경찰 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청대와 마찬가지로 보군통령(步軍統領)이 관할하던 사교(四郊)의 호구까지도 1924년 보군통령아문(步軍統領衙門)이 폐지되면서 경사경찰청에서 접수하여 관할하게 되었다.[27] 경찰 기구의 몇 차례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호정을 담당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1924년부터는 경찰이 호정을 관리하는 지역적 범위가 성구를 넘어서 사교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7·7 사변 이후 일본군이 북경을 점령하게 된 후에도 경찰 기구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호정을 관리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일본 점령기 북경의 경찰국은 국민정부 시기의 북평시 공안국을 이은 것으로서, 전쟁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서 고문실(顧問室), 특무과, 경제과, 독찰처(督察處) 등을 설치하고 일부 단위의 명칭을 고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조직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28] 소재지 역시 북경정부 시기 경사경찰청 이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29]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기구의 호정 부문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북경의 경찰 기구에는 경찰국의 호정 담당 과에서 파출소의 호적경에 이르는 호구 행정 담당 부서와 인원이 있었다. 경찰국의 여러 과 중에서 호적 담당 부서는 보안과였다. 보안과는 국민정부 시기 공안국에서는 제2과로 불리다가 1937년 2월의 개

---

26) 이 조치를 통해 별도로 관리되던 旗人의 戶口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27) 韓光輝, 앞의 책, p. 130.

28)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 259.

29)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 256. 警察局의 소재지는 前門內順城街로서 현재의 국가박물관에 해당하며 청대에는 吏部衙門이 있던 곳이었다.

편에서 행정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39년 5월에 다시 제2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1941년 2월의 개편에서 보안과로 바뀌었다. 보안과 아래에는 보안고(保安股), 교통고(交通股)와 함께 호적고(戶籍股)가 있었다.[30] 보안과의 주요 업무는 "치안을 파괴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보안과에서는 시 전체 주민의 호적을 파악하고 거민증을 발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했으며, 또한 사회단체, 공상기업, 오락장소, 여관, 기원, 음식점, 정류장 등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른바 "불량행위(不良行爲)"나 "불온상황(不穩狀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그 외에 위생, 교통, 소방 등의 업무는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다고 한다.[31]

기층의 파출소에서도 인구관리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각 단내 주민의 호구는 파출소에서 등기하여 명부를 만들었고, 같은 양식으로 세 부를 만들어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두 부는 분국과 총국에 보냈다. 이 외에 임시호구는 반드시 거주증을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등기해야 했으며, 여관의 투숙객들은 숙박부 〔店簿〕에 등록해야했고 기원의 손님들은 명부 〔客簿〕에 등록해야 했으며, 이것을 매일 파출소에 보내 심사했다. 파출소는 수시로 호구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여관, 기원, 공공장소, 기업 등에서 의심스러운

30) 『北京警察沿革』, pp. 11-14. 1941년 2월의 개편은 일본 헌병대에서 파견한 일본인 指導官인 角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개조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 260-266.)

31)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 261-262. 公安局 시기의 第二科 산하에는 戶籍股 외에 治安股, 交通股, 調查股, 衛生股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衛生股는 1933년 10월에 위생국이 설립되면서 위생국으로 이관되었다. 1939년 8월에는 汽車股가 설립되었다. 1941년 2월의 개편으로 保安科 산하에는 保安, 交通, 車輛, 戶籍, 稽徵 등 5개의 股가 두어졌다. 이 중 稽徵股는 1943년 1월에 財政局으로 이관되었으며, 車輛股는 1944년 4월에 交通股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保安股 산하에는 衛生取締室이 있었다. (『北京警察沿革』, pp. 10-12.)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분국에 보고하였다.[32]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들이 기층의 호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점령 이전부터였지만, 점령 이후 북경시 경찰 당국에서는 각 파출소에 호적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을 배치하였다. 북경특별시 경찰국에서는 1939년 '호정을 정돈하기 위해' 각 파출소에서 호적 사무를 처리하는 인원을 전임제로 바꾸어 매 단에 호적경사 2명을 두어 호정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기타 업무는 겸하지 않도록 했다.[33] 그러나 호적경 이외의 파출소 경찰들이 호정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국에서는 1943년 초 각 분국 이하 파출소에 내린 훈령을 통해, 호적경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호구 이동의 신고 등 호정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 훈령에서는 '최근 경찰업무가 많아져 호적경사가 때로는 겸임을 피할 수 없어 잠시 전임의 본 뜻을 잃게' 되었다고 하면서, '호적은 백정(百政)을 시행하는 근본이고 호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종 시책의 근거가 없어진다'면서 호정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 속한 인원은 모두 호적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34] 시공서 본국 보안과의 담당자가 파견되어 호구 표본조사 〔抽查〕를 하는 등의 특수한 호정 업무는 당연히 호적경이 전담했으나,[35] 각 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사들은 모두 구역을 나누어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자기 담당 구역의 경찰 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적 사무와 무관할 수 없었다.[36]

---

32)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 266-267.

33)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訓令(1943.2.27.)」, J183-002-18200.

34) 위와 같음.

35) 경찰국 보안과 직원이 分駐所에 파견되어 실행한 戶口抽查에 대한 보고를 보면, 담당 戶籍警이 파견된 조사원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北京特別市警察局內四分局第五分駐所關於戶口抽查的呈(1944.12.16.)」, J183-002-25898.)

36) 內二分局 第五派出所 내의 警士들이 담당 구역을 나눈 사례를 보면, 二

호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 점령당국이 북경 성구의 호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기가 바로 1941년에서 1942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치안강화운동(治安强化運動)' 기간이었다.[37] 치안강화운동은 북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화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38]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진 치안강화운동은 주로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유격세력에 대응하여 군사적·행정적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미 일본군의 통제력이 확립된 북경 성구에서의 치안강화운동은 농촌 지역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북경 성구에서의 치안강화운동, 특히 제1차 치안강화운동은 치안 확립을 위한 호구조사를 핵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 때의 여러 조치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점령 이후 경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호정 계통을 통해 이루어지던 호구조사에 일본군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었다. 치안강화운동 이전에도 일상적인 호구 관리 외에 따로 호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사들은 모두 경찰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39] 그

等警士 2명과 三等警士 5명 등 총 7명의 警士가 각각 85戶 내지 151戶를 맡고 있다. (「內二分局第五派出所管界各警士勤務分擔圖(1945)」, J181-005-00055.)

37) 5차의 치안강화운동의 실시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차 : 1941년 3월 30일 - 4월 3일
제2차 : 1941년 7월 7일 - 9월 7일
제3차 : 1941년 11월 1일 - 12월 25일
제4차 : 1942년 3월 30일 - 6월 15일
제5차 : 1942년 10월 8일 - 12월 10일
王國華, 「關於日僞的五次治安强化運動」, 北京市檔案館 編, 『日僞在北京地區的五次强化治安運動』, 北京燕山出版社, 1987(이하 '『治安强化運動』'으로 약칭), p. 2.

38)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華北의 치안강화운동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尹輝鐸, 『中日戰爭과 中國革命-戰爭과 革命의 二重奏 戰爭革命』, 一潮閣, 2002 참조.

39) 1937년 말의 신문에는 '冬防 시기를 맞아' 특별히 城郊 15區에 戶口의

런데 제1차 치안강화운동에서는 호구조사가 일본군 헌병의 지휘 아래 실시되었다.

북경 성구에서의 치안강화운동 계획을 제시한 문건에서는 '북경시 호구의 조사는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개선·완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호구조사의 주체에 대해서는 일본 헌병대를 통해 중국 경무(警務) 기관을 총동원하여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40] 실제 호구조사를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북경헌병대 특고과(特高課)에서 경찰분국마다 헌병 하사관 3명을 파견하도록 지시하였다. 파견된 3명 중 1명은 구대장(區隊長)을 맡고, 나머지 2명은 조장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파출소마다 견습헌병〔憲補〕 1명을 파견하여 호적경 1명을 포함하는 '중국경찰' 3명 및 통역 1명과 함께 1개 반을 조직하도록 했다. 파출소 단위까지 헌병을 파견하여 경찰과 함께 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는 결과를 호구조사부에 등록·정리하고, 헌병이 현장에서 조사필증〔調查完畢證〕 위에

조사를 명령한 내용이 나온다. (「淸查戶口: 北京警察局通令各區署」, 『實報』 1937.11.8.) 1938년 초에도 '國家甦生·戶政維新의 때를 맞아'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樂戶나 旅館 등에 대한 검사가 강조되고 있다. (「警察局保護善良認眞調查戶口」, 『實報』 1938.1.1.) 1939년 초 경찰의 '特別戶口調查'를 보도하는 기사에는 '警察局이 「特別調查戶口辦法」을 규정하여 內外城 11區에서 試辦한 成績이 良好하여 당국에서는 이 辦法을 四郊에서도 推行하여 戶政을 展進시키려'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警察廳特別調查戶口」, 『實報』 1939.1.13.)

40) 「北京陸軍特務機關函送市治安强化運動實施計劃案(1941.3.16.)」, 『治安强化運動』, p. 26. 이 문건은 北京 주둔 일본군의 特務 부문에서 작성되었다. 市公署 및 기타 관련 부문의 치안강화운동 관련 문건은 모두 이 문건보다 늦게 작성되었다. 이 문건은 2월 15일의 「華北方面軍參謀部第四課治安强化運動實施計劃」과 3월 11일의 「華北政委會實施第一次治安强化運動訓令」에 근거한 것이었다. 華北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과 北京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모두 일본군 쪽에서 먼저 계획이 작성되고 이후 정부기관에서 관련 문건이 발표되고 있다.

날인하고 이를 조사한 호의 입구에 붙이도록 했다.[41] 실제로 파견된 헌병의 규모를 보면 내성에는 7개의 구대와 14개의 조, 119개의 반이 편성되어 총 21명의 헌병 하사관과 119명의 헌병교습병이 파견되었으며, 외성에는 6개의 구대, 12개의 조, 98개의 반이 조직되어 총 18명의 헌병 하사관과 98명의 헌병교습병이 파견되었다.[42] 이상과 같이 제1차 치안강화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호구조사는 일본 헌병의 지도 하에 실시되었으며, 파출소 단위까지 헌병이 파견되어 실제 조사과정에 개입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까지 기존의 경찰 기구에 의존했던 호정 방면에 일본군이 깊이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성내에서 벌어졌던 일본 군관 피습사건이 놓여 있었다. 1940년 11월 29일 오전 9시에 두 명의 일본군 장교가 말을 타고 가다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접근한 중국인의 총격을 받아서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북지방면군의 중좌(中佐)인 '高月와 森蔭'이었다.[43] 이 사건은 일본군에게 큰 위협을 주었으며, 북경 성내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하였다.[44] 이 때문에 일본 헌병대의 호구조사본부에서는 특수시설, 국방 중요시설 자원, 일본과 중국 고급 군관의 집무실, 일본인 및 중국인 요인의 경계 등을 중시하면서 관련 시설 인근에 대해서

41) 「(極密)北京憲兵隊特高課長對實施戶口調查的指示(1941.4.6.)」, 『治安强化運動』, pp. 45-46. 이 문건은 공식적 1차 치안강화운동의 종료일인 4월 3일보다 늦게 나온 것이다. 이는 호구조사의 실시가 치안강화운동 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北京의 치안강화운동 계획 문건을 보면 호구조사 기간을 1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北京陸軍特務機關函送市治安强化運動實施計劃案(1941.3.16.)」, 『治安强化運動』, p. 23.)

42) 「(軍事秘密)北京憲兵隊戶口調查本部對戶口調查員的指示事項(1941.4.6.)」, 『治安强化運動』, p. 51.

43) 穆玉敏, 앞의 책, pp. 203-204.

44) 王國華, 「關於日僞的五次治安强化運動」, 『治安强化運動』, p. 4.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45] 1차 치안강화운동에서 일본군 헌병이 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에는 일본 주둔군의 자기보호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1차 치안강화운동의 호구조사 방식은 전례없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파격이 호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치안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고 호구 관리 상황의 점검은 주요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파견된 헌병 인력의 규모도 그리 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호구조사 과정에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조사 방식은 '수색(搜索)식의 호구조사'로 규정되었고, 불온분자를 적발·검거하고 '총기 및 화약〔槍炮火藥〕, 독극물〔劇毒藥物〕, 연소제(燃燒劑), 무선기기〔無線電機〕' 등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이 외에도 기존에 형식적으로 조사했던 외국인이 고용한 중국인과 만주국인, 그리고 기타 의심지역 등이 호구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46]

일본군이 주도하는 호구조사라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일회적인 것에 그쳤다. 2차 이후의 치안강화운동에서도 계속해서 호구조사나 그 밖의 치안을 위한 각종 조사가 강조되지만 일본군의 개입은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찰조직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 치안강화운동에서도 호구조사가 계획되었지만, 경찰국의 호적 인원이 파출소의 호적경을 인솔하여 진행하도록 했으며, 조사 방식도 구마다 하루 100호 이내의 범위에서 표본조사〔抽查〕를 하는 것이었다.[47] 1차 때와는 달리 일본 헌병의 지휘가

45) 「(軍事秘密)北京憲兵隊戶口調查本部對戶口調查員的指示事項(1941.4.6.)」, 『治安强化運動』, p. 52.

46) 「(極密)北京憲兵隊特高課長對實施戶口調查的指示(1941.4.6.)」, 『治安强化運動』, pp. 44-46.

47) 「警察局呈報第二次治安强化運動計劃大綱(1941.7.5.)」, 『治安强化運動』, p. 120.

없었을 뿐 아니라, 전체 치안강화운동에서 호구조사가 특별히 강조되지도 않았다. 2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경찰국 보안과에서 분국에 보낸 통지를 보면 치안강화운동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호구조사에서 '특수가옥' 및 관아·공서 부근 주택의 호구조사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서 검문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때 이루어진 호구조사 자체는 정기적인 추계 호구조사였음을 알 수 있다.[48]

이후의 치안강화운동에서는 초점이 호구조사가 아닌 공산당 및 기타 의심분자의 적발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4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에는 '공비〔匪共〕를 철저하게 숙청하기 위해서' '종합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종합검사'의 목표는 1) 공산당, 2) 비적과 도망병〔匪賊散兵〕, 3) 불량분자 및 반동서적 등이었다. 또한 검사 대상 역시 집단거주지나 치안 취약 지점에 한정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각 구의 업무부담〔繁簡〕에 따라서' 3개나 5개 반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각 반에는 국원(局員) 1명, 관경(官警) 6명, 정집대(偵緝隊) 2명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49] 1차 치안강화운동과 비교하면 조사 대상이 한정되었고, 참가한 인원도 훨씬 적었던 것이다. '종합검사'의 성과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총 484명이 동원되어 1,175호를 검사했다고 한다.[50]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경 성구에서의 치안강화운동은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일본 헌병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치안의 강화에

48)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保安科通知(1941.8.25.)」, J181-022-13166.

49) 「警察局第四次治運城區綜合檢查方案(1942.6.9.)」, 『治安强化運動』, pp. 387-389.

50) 「警察局第四次治强運動實施狀況報告-第四期報告(1942.6.)」, 『治安强化運動』, p. 406.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조사의 대상이 포괄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존의 호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1차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호정 인원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했다.

치안강화운동 기간 동안 호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찾자면, 신분증인 '거주증(居住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운동이 새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분증의 도입은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제도의 출발이었으며, 경찰을 통한 인구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거주증은 화북정무위원회(華北政務委員會)에서 '치안을 강화하고 선량한 민중의 안전을 보장하며 호적 정리의 실행을 도와 사회 기초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여행증(旅行證)과 함께 도입한 것이었다. 1941년 3월 1일에 제도 시행을 공포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 화북 각 성(省)·시·현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거주증의 발급 대상은 만 12세에서 60세 사이의 주민이었다. 또한 거주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좌우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51] 북경 경찰은 이미 1933년부터 사법과 산하에 지문반을 설치하여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52] 그리고 지문을 신분 관리에 이용한 것으로서 1939년 초에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다시 입대〔入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감정을 실행했던 선례가 있었다.[53] 또한 거주증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전문적으로 지문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경찰국 산하에 거주증

---

51) 「警察局保安科關於"頒發居住証以確保良民之安全"講演詞(1941.5.21.)」, 『治安强化運動』, pp. 149-152. 조사를 거친 極貧住民은 사진 부착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거주증에 '極貧'이라고 注明하고 지문으로 대체하였다.

52) 林相範, 「北京 地域 警察本部의 組織 內容-1928년부터 1949년까지」, pp. 20-22.

53) 「社會短訊」, 『實報』 1939.1.14.

지문정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54] 북경에서의 거주증 발급은 화북정무위원회의 계획보다 약간 늦은 1941년 8월에 이루어졌다. 경찰국의 8월 6일자 통고에 따르면, 경찰국에서는 각 분국에 8월 1일 이전까지 호마다 신청서를 발송하도록 명령하였고 8월 초 시점에서 이미 관할 파출소를 통해 거주증을 발급 중이었다. 또한 여관이나 하숙집에 거주하는 미신청자들에게 8월 15일 이전에 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통고하였다. 타 지역의 호적을 가진 사람들도 북경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에는 모두 북경시의 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했으며, 8월 16일부터 대검사(大檢查)를 실시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55]

거주증의 발급 목적이 애초에 치안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안강화운동 기간 동안 거주증 관련 내용이 치안강화운동 계획에 포함되어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56] 1차 치안강화운동는 북경에서 거주증 발급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헌병대 특고과에서는 호구조사에 대한 문건에서 '중국경찰이 작성한 호구조사부를 기초로 실제의 정황과 철저하게 대조하여 이후의 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정한 기초를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있다.[57] 몇 달 앞으로 계획된 거주증 발급의 준비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은 거주증 발급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거주증 발급 사무 자체를 치안강화운동의 일환으

54) 「爲成立居住證指紋整理所案(1941)」, J181-017-00487. 각 分局에서 40명의 警士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후에, 1941년 1월 24일에 정식으로 성립하였다.

55)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通告(第141號)(1941.8.6.)」, 『治安强化運動』, p. 164.

56) 居住證指紋管理所 성립에 관한 문건에서도 거주증 발급의 목적에 대해서 거주증의 발급이 '치안을 강화하는 初步에서 가장 중요한 공작'이며 '罪犯의 검거와 戶籍의 조사에 특히 유익'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爲成立居住證指紋整理所案(1941)」, J181-017-00487.)

57) 「(極密)北京憲兵隊特高課長對實施戶口調查的指示(1941.4.6.)」, 『治安强化運動』, p. 45.

로 설정하고 있었다. 2차 치안강화운동의 실시방안에서 구무감리처(區務監理處)의 실행 계획의 일부로 '거주증 작성 및 발급에 협조'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경단(警段)의 범위에 따라 단마다 2개 조를 편성하도록 했는데, 각 조는 방장(坊長)과 이장(里長) 각 1명과 서기 1명 등으로 구성하여 7월 31일까지 호적경과 함께 매일 호마다 작성·발급하도록 했다.[58]

거주증 제도가 실시된 이후 이루어진 치안강화운동에서는 거주증 검사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컨대 4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에는 경찰국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증 소지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사하였다. 운동 기간이던 1942년 5월 11일에서 25일 사이에 경찰국은 소속 각 분국을 지휘하여 거주증 검사를 실시하여 2,221명의 미휴대자를 발견하여 그 중 일부를 처벌하였다.[59] 다음 달인 6월 1일에서 14일에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겨우 12건만 적발되었다고 한다.[60] 5차 치안강화운동에서도 거주증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이 때에는 소지 여부뿐 아니라 위조 및 도용 여부도 검사하였다. 1942년 10월 21일에서 11월 9일 사이 각 성문 및 정류장에서 실시된 통행인의 거주증 검사에서는 위조·도용 및 기타 위반자 1,282명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자들은 법원으로 보내 구류되거나 훈계 처분을 받았다.[61]

거주증 검사가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후 점령 기간 내내 북경에서 거주증은 유효한 신분증명 제도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치안강화운동

58) 「市公署第二次治安强化運動實施方案(1941.7.)」, 『治安强化運動』, pp. 142-143.
59) 「警察局第四次治强運動實施狀況報告-第三期報告(1942.5.)」, 『治安强化運動』, p. 399.
60) 「警察局第四次治强運動實施狀況報告-第四期報告(1942.6.)」, 『治安强化運動』, p. 405.
61) 「北京特別市公署第五次治安强化運動總報告書(1942.12.)」, 『治安强化運動』, pp. 529-533.

기간에 적발된 위조나 도용 사례의 존재는 거주증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거주증을 저당잡히는 사례도 있었으며,[62] 점령 말기까지도 거주증과 관련된 경찰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주소에서는 거주증 분실 신고와 관련 재발급을 해주기 전에 실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증서 [保結] 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63] 거주증 신청에 대해서 분주소 경관이 파출소의 호적경과 함께 가서 실제 거주 현황을 조사하기도 했다.[64]

거주증 제도는 전후에 국민정부가 실시한 국민신분증 제도에 선행하여 북경 시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신분증 제도였으며, 이를 통해 북경의 경찰은 신분증 제도 운영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6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점령기 북경의 호정은 점령 이전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경찰 기구를 통해 호정을 관리하는 청말 이래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국-분국-분주소-파출소로 이어지는 경찰조직의 틀 역시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1941년에서 1942년 사이에 치안강화운동을 통해서 호정과 관련된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거주증의 도입 정도에 그쳤고, 기구와 인원 및 운영 면에서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

62)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保安科關於防止市民抵押居住證案的通知(1941.12.13.)」, J181-022-13181.

63) 「北京特別市警察局內四分局第四分駐所關於補發居住證的呈(1944.12.1.)」, J183-002-25898.

64) 「北京特別市警察局內四分局第三分駐所關於補發居住証的呈(1944.12.18.)」, J183-002-25898.

6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국민신분증 제도를 대체하는 신분증 제도가 없다가 1984년에 가서야 '居民身分證'을 도입하였다. (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 『北京志 綜合卷 人口志』, 北京出版社, 2004, pp. 294-295.)

4. 전후 국민당 정권의 개혁 시도

앞서 언급했듯이 전후 국민당의 복귀가 경찰 기구의 구조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에 경찰의 인구관리라는 청말 이래의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1947년에 청말 이래 40년 이상 경찰이 호정을 담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정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정부 산하에 민정국을 설치하고 경찰국의 호정 부문을 민정국으로 이관했던 것이다.

민정국을 설치하고 호정을 이관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이 북경을 접수한 이후 민정국 접관(接管) 사무 담당자들은 공작보고에서 북평시정부가 1947년 2월에 사회국과 경찰국의 일부 인원 및 당안(檔案)을 흡수하여 민정국을 설치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군통계(軍統系)의 세력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66] 그러나 이렇게 민정국 설치와 국민당 내부의 파벌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었다. 실제로 민정국 설치는 북평시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호적법(戶籍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이 있었다.

국민정부의 「호적법」은 1931년 12월 12일에 처음으로 공포되었 고, 1934년 3월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항일전쟁 이후 1946년 1월에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1946년에 개정된 「호적법」에서 새롭게 바뀐 것 중 하나는, 호정의 주관기관을 명시한 점이었다. 개정 「호적법」의 제3조에서는 '호적행정의 주관기관은 중앙에서는 내정부(內政部), 성에서는 성정부(省政府), 현에서는 현정

66) 「北平市民政局接管工作綜合報告(1949.3.31.)」, 北京市檔案館 編, 『(城市解放系列叢書)北平解放(上)』, 中國檔案出版社, 2009. p. 495.

부(縣政府)로 한다'고 주관기관을 명시했다.[67]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행정원(行政院)에서 공포한 「호적법시행세칙」에서는 주관기관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했다. 즉, 제3조에서 '시정부는 민정국에 호정과를 설치해야 하고, 민정국을 설치하지 않은 시는 시정부에 호정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여, 민정국이나 호정과가 호정의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68] 이러한 규정은 새로운 것으로서 경찰국에서 호정을 주관하는 북경의 상황과도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의 호정 주관기관에 대한 원칙과도 달라진 것이었다.[69]

국민정부 행정원에서는 「호적법」과 「호적법시행세칙」의 후속 조치로서, 호정 기구 조정에 관한 원칙과 이관 시한을 제시하였다. 즉 1946년 12월에 공포한 「조정각시호정기관원칙(調整各市戶政機構原則)」에서, '각 원할시(院轄市) 및 성할시(省轄市)는 수정 호적법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원래 경찰 기관에서 담당하던 호적행정을 시정부 및 각급 자치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고치며, 늦어도 (民國) 36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마치고, 그 이관 방법이나 순서는 각급 시정부에서 스스로 적절하게 정하고 내정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70] 이상과 같은 제도의

---

67) 「戶籍法(1946年第二次修正)」, 張慶五 輯, 『舊中國戶籍法規史料(淸朝末至中華民國)』, 中國人民公安大學·包頭市公安局, 1986(이하 '『戶籍法規』'로 약칭), p. 54.

68) 「戶籍法施行細則(1946年6月21日行政院公布)」, 『戶籍法規』, p. 60.

69) 1944년에 國民政府에서 제시한 각 지방정부의 戶政 주관기관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省 民政廳에 戶政科를 설치한다.
(2) 각 縣政府의 民政科나 警佐室에 戶政股를 설치한다.
(3) 院轄市 경찰국에 戶政科를 설치하고 分局에는 戶政股를 설치한다.
(4) 省轄市 경찰국 行政科에 戶政股를 설치한다. 分局에는 專任 員警을 두어 처리하도록 한다.
「省市縣各級戶政機構充實辦法草案(1944年11月)」, 『戶籍法規』, p. 192.

70) 「調整各市戶政機構原則(1946年12月16日行政院核定)」, 『戶籍法規』, p. 185.

변화는 경찰행정과 호적행정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호정분립(戶警分立)'의 원칙을 확립한 것이었다.[71] 그리고 이렇게 경찰 계통과는 별도로 호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수립한 것은 호정기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942년에 내정부 산하에 호정사(戶政司)를 설립한 이래 추진해 오던 정책의 연장이었다.[72]

호정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따라 북평시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1946년 6월 14일의 시정부 제16차 시정회의에서는 각 성·시정부에서 민정국이나 민정과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내정부 지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천진시(天津市)의 예를 따라서 잠시 설치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73] 행정원에서 「호적법시행세칙」을 공포한 이후에 열린 1946년 7월 26일의 제19차 시정회의에서도 호적은 민정국을 통해서 관리하거나 호정과를 설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경찰국 내에 호정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호적경을 감독하여 조사·처리하는 상황과 다른' 문제가 논의되었다. 만약 시행세칙에 따를 경우에 '편제가 바뀌어야 하며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논의 끝에 경찰국 호정과에서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74] 이때까지는 일단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행정원의 호정 기구 조정에 대한 12월의 지시가 있은 후에는 결국 민정국을 수립했으며, 1947년 1월 24일에 열린 제31차 시정회의부터는 민정국장 마한삼(馬漢三)이 시정

71) 王海光, 앞의 논문, p. 54.

72) 戶政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周中一 編, 『(戶政幹部人員訓練教材之一)現行戶籍行政制度』, 內政部, 1946, p. 104 참조. 戶政司 설치 이래의 戶政 담당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 27-28 참조.

73) 北京市檔案館 編,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이하 '『市政會議』'로 약칭), p. 559.

74) 『市政會議』, p. 568.

회의에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5]

경찰국의 호정 업무가 민정국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경찰 기구가 호정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었다. 새롭게 호정 업무의 주관 기관이 된 민정국은 경찰국과는 달리 산하에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층에 이르는 민정 계통의 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경찰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정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1948년 4월 16일의 제60차 시정회의와 5월 14일의 제62차 시정회의에서 호적 처리에 대한 민정국과 경찰국의 '직권쟁의(職權爭議)'를 다루는 안건이 논의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76] 1948년 9월 2일의 제70차 시정회의에서는 이전에 민정국과 연계할 방법을 논의하라고 반려했던 '戶口查記'의 경비 문제를, 경찰국에서 '민정국이 처리하는 호정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다시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77] 이와 같이 민정국의 설립과 호정의 이관 이후에도 호정을 주관해 오던 기존의 지역조직을 관할하고 있던 경찰국은 여전히 호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민정국과 직권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민정국의 설립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시급 단위에서의 업무 이관에 불과했다. 민정국은 인구관리에 필요한 자체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완전한 호정의 이관을 위해서는 '민정' 계통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경찰 기구와는 독립적인 자체의 기층 조직을 갖추는 일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전이 진행중이었던 1947년 단계에서 북평시정부는 이러한 국가기구의 확대를 추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민정계통으로의 인구관리 이관은 전후에 호정 관리의 원형을 제공했던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이루어진 변화와 같은 방향이었지만,

75) 『市政會議』, p. 604.
76) 『市政會議』, pp. 677-683.
77) 『市政會議』, p. 705.

중국에서는 그러한 이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권 자체가 유지되지 못했다. 인구관리의 체계를 수정하는 일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경은 또 다시 정권의 교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말 이래 경찰의 인구 관리라는 성격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일본 점령 이래 경찰 행정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뿐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의 패전 이후 국민당이 북경을 다시 접수하면서도 인력 교체는 주로 경찰국 소속의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간부들과 달리 일반 경찰관들의 교체는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경찰 기구의 조직구조 역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민국 시기 북경에서 경찰은 유일하게 지역별로 기층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국가 기구로서 인구 관리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찰 기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시공서의 다른 부문들과는 달리 국을 정점으로 기층의 파출소에 이르는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되었다. 일본 점령기의 '치안강화운동'은 일본 헌병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져왔으나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47년에 이루어진 호정의 민정국으로의 이관은 이러한 장기적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이었으나 민정을 담당하는 기층 조직의 부재로 인해 불완전한 것이었다.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기층 통치에서 가지는 경찰의 위상 및 인구 관리의 경찰 담당은 장기적인 구조로서, '혁명' 이전의 방

식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공산당의 도시 기층 사회로의 침투는 주로 경찰이 아닌 다른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경찰을 통한 기층 통치라는 측면에서는 강력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史料

(1) 北京市檔案館 所藏 檔案

「北平市公安局呈送戶口調查辦法」, J001-001-00484.
「關於重要警政戶口清查統計總報告材料」, J181-005-00055.
「有關各項警務·治安問題的提案和討論的城區公益會章程」, J181-017-00487.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保安科關於各分局秋季普查戶口的通知」, J181-022-13166.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保安科關於防止市民抵押居住證案的通知」, J181-022-13181.
「北平市警察局內三分局關於切實整理戶冊整理·辦理戶政·爲訓練戶籍警對於戶籍主任及班長選送塡充斯任各單及抄發坊里長會查戶口暫行規則」, J183-002-18200.
「北平市警察局內四區關於調查補發梁興居住證及協助坊里等人調查清潔費的呈」, J183-002-25898.

(2) 정기간행물, 단행본, 사료집

『實報』
北京市檔案館 編, 『日僞北京新民會』, 光明日報出版社, 1989.
北京市檔案館 編, 『日僞在北京地區的五次强化治安運動』, 北京燕山出版社, 1987.
北京市檔案館 編,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北京市檔案館 編, 『(城市解放系列叢書)北平解放(上·下)』, 中國檔案出版社, 2009.

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北京志 政務卷 民政志』, 北京出版社, 2003.
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北京志 綜合卷 人口志』, 北京出版社, 2004.
張慶五 輯, 『舊中國戶籍法規史料(淸朝末至中華民國)』, 中國人民公安大學・包頭市公安局(內部參考), 1986.
章伯鋒・莊建平 主編,『中國近代史資料叢刊13 抗日戰爭 第6券 日僞政權』, 四川大學出版社, 1997.
周中一 編,『(戶政幹部人員訓練敎材之一)現行戶籍行政制度』, 內政部, 1946.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北京市委員會文史資料硏究委員會 編,『日僞統治下的北平』, 北京出版社, 1987.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 編,『文史資料存稿選編8 日僞政權』, 中國文史出版社, 2002.
蔡恂,『北京警察沿革紀要』, 北京特別市公署警察局, 1944.

2. 논문

林相範,「20世紀 前半期 北京의 警察과 市民生活」,『中國學報』48, 2003, pp. 533-556.
林相範,「北京 地域 警察本部의 組織 內容-1928년부터 1949년까지」,『大邱史學』78, 2005, pp. 1-40.
임상범,「北京地域 警察官의 構成과 그 變化」,『中國近現代史硏究』, 27, 2005, pp. 1-36.
임상범,「北京地域 警察의 基層組織-1901년부터 1949년까지」,『大丘史學』88, 2007, pp. 1-28.
公一兵,「北京近代警察制度之區劃硏究」,『北京社會科學』, 2004-4, pp. 104-114.
段銳・劉貝,「中國近代警政史硏究綜述」,『江蘇警官學院學報』, 2013-1, pp. 46-55.
王海光, 「中國戶籍制度現代化演進路徑的歷史考察(1908-1949)」, 『安徽史學』, 2011-5, pp. 51-58.
劉貴利,「北京城市社會區的變遷」,『人文地理』18-3, 2003-3, pp. 28-31.
劉鼎銘,「國民政府籌辦全國戶口普查經過述略」,『民國檔案』, 1993-1, pp. 55-57.
李自典,「警察與近代北京城市治安管理-以1901~1937年爲中心的考察」,『北京社會科學』, 2010-4, pp. 78-85.
趙文遠,「1958年中國改變戶口自由遷移制度的歷史原因」,『史學月刊』, 2004-10,

pp. 76-80.
曾業英,「略論日僞新民會」,『近代史研究』, 1992-1, pp. 253-268.
湯水清, 「論新中國城鄉二元社會制度的形成」, 『江西社會科學』, 2006-8, pp. 97-104.
Cheng, Tiejun; Selden, Mark, "The Origins and Social Consequences of China's Hukou System", *The China Quarterly*, 139, 1994, pp. 644-668.
Dray-Novey, Alison, "Spatial Order and Police in Imperial Beijing", *Journal of Asian Studies*, 52, no.4, 1993, pp. 885-922.
Huen, W.P.,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he Qing Dynasty: Precursor to the PRC's Hukou System", *China report*, 32-4, 1996, pp. 395-418.
Wakeman, Jr., Frederic, "Models of Historical Change: The Chinese State and Society, 1839-1989", Kenneth Lieberthal et al., ed., *Perspectives of Modern China: Four Anniversaries*, Armonk, M. E. Sharpe, 1991, pp. 68-102.

3. 단행본

尹輝鐸,『中日戰爭과 中國革命-戰爭과 革命의 二重奏:戰爭革命』, 一潮閣, 2002.
이민자,『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江沛,『日僞 "治安强化運動" 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06.
郭貴儒・張同樂・封漢章,『華北僞政權史稿: 從"臨時政府"到"華北政務委員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穆玉敏,『北京警察百年』,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4.
費正・李作民・張家驥,『抗戰時期的僞政權』, 河南人民出版社, 1993.
劉敬忠,『華北日僞政權研究』, 人民出版社, 2007.
魏斐德, 梁禾 譯,『紅星照耀上海城1942-1952 - 共産黨對市政警察的改造』, 人民出版社, 2011.
尹鈞科・羅保平・韓光輝・毛希聖・富麗,『古代北京城市管理』, 同心出版社, 2002.
張同樂,『華北淪陷區日僞政權研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2.
夏衛東,『民國時期浙江戶政與人口調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韓光輝,『北京歷史人口地理』, 北京大學出版社, 1996.
姬田光義 編,『戰後中國國民政府史の研究—1945~49年』, 中央大學出版部, 2001.

姬田光義・山田辰雄, 『中國の地域政權と日本の統治』,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
Dutton, Michael Robert, *Policing and Punishment in China : from patriarchy to "the peop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Reynolds, Douglas R., *China, 1898-1912: The Xinzheng Revolution and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一〉 任達, 李仲賢 譯, 『新政革命與日本: 中國, 1898-1912』, 江蘇人民出版社, 2006.)
Strand, David, *Rickshaw Beijing: City People and Politics in the 1920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Wakeman, Jr., Frederic, *Policing Shanghai, 1927-193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一〉魏斐德, 章紅 外譯, 『上海警察, 1927-1937』, 人民出版社, 2011.
Wang, Fei-Ling, *Organizing through division and exclusion : China's Hukou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Abstract]

Beijing's Police and Population Management of the Late Republican Era

Yoon, Hyong-Jin

Local police stations are in charge of governing its urban districts and especially there has existed a structure that the police as an organization undertaking its household administration, manages population ever since the late Qing period. In the teeth of political upheaval of Japanese occupation and the post-war Guomindang's comeback, there has been no big change in the personnel/institutional composition of the police. Though 'security reinforcement campaign' during Japanese occupation showed a new factor of Japanese military police's intervention, it was only temporary, not leading to institutional change. It was a new change that in 1947, the Guomindang set up Civil Affairs Bureau under municipal government to which it transferred the household administration but the household administration at the lowest level was still taken care of by police stations. In such a state another regime change took place when the CCP took over Beijing and due to the subsequent transfer of the civil side's household administration to the Public Security Bureau, population management by the civil side ended up being a short exception. Conclusively, China's current way for the police to manage population is a legacy passed down since before the 1949 Revolution.

Key words: Beijing, the police, local police station, household administration, continuity, security reinforcement campaign, Civil Affairs Bureau

윤형진
소속: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전화번호: 011-9643-6898
전자우편: sltwk@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3월 8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